

第269回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10月5日(金)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보고

審査된案件

1.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보고 1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2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8개 항에 걸친 이번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간 경제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남북자 문제 등 일부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본격적인 남북 개방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 선언이 구체화되고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정치적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여건들이 성숙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언문의 내용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지우는 사안들과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회담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그 문제점이나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1.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보고

(14시18분)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남북 정상회담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이재정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간 남과 북

의 두 분 정상외의 포괄적이고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높이고 그 결실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성과물을 내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 화해·협력 등 남북 관계 발전 전반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도 국민과 국회와 함께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7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과 보고와 함께 주요 합의내용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 향후 조치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과 보고입니다.

2007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공식 수행원 13명, 특별 수행원 49명, 일반 수행원 88명, 그리고 기자단 50명 등이 육로로 방북하였습니다. 실로 분단 5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방북 기간 중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평화 정착, 공동 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북 기간 중 평화자동차, 서해갑문 등 경제시설 참관 및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귀한 시에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각계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 수행원은 7개 분야별로 나누어 남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개 분야는 정치, 대기업 분야, 업종별 분야, 종교 분야, 문화·예술·학계 분야, 사회단체·언론 분야 그리고 여성 분야였습니다.

방북기간 중 특별 수행원들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만수대창작사, 3대혁명전시관, 중공업관 등을 참관하였습니다.

북측은 회담 기간 중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을 환대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직접 영접을 하고, 군의장대사열을 하였으며, 당·정·군 고위 영접인사 23명이 참석하고, 평양시민 연도 환영 등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한다고 하는 것이 합의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 확고히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며,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하고, 남북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며, 서해 평화 정착 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넷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핵문제 해결에 관한 노력입니다.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또한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6자회담의 틀에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남북 경협 확대·발전, 그리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관한 합의사항입니다.

남북 경협을 위하여 투자의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의 추진, 우대조건과 특혜 부여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며,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를 조속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화물수송 열차 통행을

시작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개성-신의주 간 철도,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의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 분야 등에 협력하기로 또한 합의하였습니다.

경제 회담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남북경제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이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에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도록 하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일곱째, 남북 간 인도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고, 금강산 면회소에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며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합의하였고,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남북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덟째,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째,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며, 11월 중 서울에서 그 첫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 이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에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 남북 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 정상이 이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의 그 뜻을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로 6자회담과 남북 관계의 선순환적 병행 진전 촉진입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발판을 마련함으

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선순환적으로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평화 정착을 위한 제도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라고 판단합니다.

넷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적 구조를 창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바꾸어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방면의 경제 협력을 통하여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경협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막혀 있었던 장애요인들을 모두 해소해 나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남측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에 합의하였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큰 의의라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 남북 정상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합의서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보고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 총리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이행단계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장관 회담도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여 서해 평화 정착 방안과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경협

사업 이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촉진·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동시에 이 사업들을 국민적 참여 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기구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희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2007 남북 정상회담이 2박 3일간의 고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상임위원회 보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정 통일부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그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7년 만에 개최된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동참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러웠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두 분 위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및 공동번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해 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정상회담 기간 중 발표된 6자회담 합의문과 더불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의미를 지녔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해 냈던 구체적이고도 진일보된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는 국제사회에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 아니고 평화와 화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직접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 선언 추진 협력을 포함해서 8개 항에 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개 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2개 항의 별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북핵 폐기에 실질적 조치나 의지의 표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약간 미흡하다’라는 평가도 더불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미 남북 공동선언 이전에 연말까지 북한 핵 시설 불능화를 담은 6자회담 합의문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 해결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 부상으로 하여금 6자회담 관련 사항을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도록 현장에서 바로 지시한 바 있고, 환송 오찬 헤드 테이블에 김 부상을 직접 참석시키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합의문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을 해도 “9·19,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 시설 불능화 조치가 명시된 두 합의의 이행을 명시함으로써 북핵 해결에 두 정상 간의 의지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북핵문제가 잘 안 됐다, 미흡하다라고 결코 넘어가려는 것은 오히려 의도적 회담 성과 폄하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희상 위원 본 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해서 공동선언문 4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공유한다는 선언문의 내용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북측의 굳은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양 정상이 6자회담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위원** 일각에서는 이번 공동선언이 참여정부가 잔여 임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있고 ‘약속어음 남발 아닌가’라고 하는 표현까지 어느 신문은 썼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목소리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북 관계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자체가 신뢰를 해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다음 정부에서 이전 남북공동선언을 외면해 버린다면 지난 7년 동안 획기적으로 발전해 오던 남북 간 신뢰가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하고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선언 1항에 명시된 것은 6·15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구현입니다. 이는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는 반드시 연속성을 가져야만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의 각 의제는 남과 북 모두에게 실익을 갖다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지켜져야 되고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국제사회의 이런 변화, 특히 북·미 관계의 변화라든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 정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병행해서 남북 간에 역사적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적절한 때에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열린 정상회담이 만든 합의사항은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희상 위원** 공동선언에 담긴 11월 총리급 회

담은 금번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조치는 물론이고 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각 분야별 발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행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절차에 따라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당 차원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또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합의 이행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고요, 이행을 위해서 정부 내에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참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대략 지금 일정으로 보면 다음 주까지 기획단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총리회담을 어떻게 운영하며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고 조직을 할는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위원** 향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이해봉 위원입니다.

남북 정상 선언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이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지대에 포함될 해주, 주변 지역에 설정된 NLL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 내용도 없고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추진은 분명히 NLL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통일부에서 ‘NLL 평화 정착 워크

숍 결과 보고' 해서 금년도에 한 NLL 평화 정착 워크숍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아 봤습니다. 마는 거기에 보면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LL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규정하기를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음.” 통일부가 주관한 워크숍에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이와 같은 NLL 무력화의 의지를 표현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NLL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항이었는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말씀하신 서해에 새로운 평화지대 설정에 대한 이 계획은 우리 정부측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양 정상 간에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신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서해에 긴장 완화를 하고 서해에 무력 충돌을 막아 나가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이룩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경제협력 사업을 통한 평화의 구축,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서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이해봉 위원** 거론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서 북한은 NLL 무력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거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봉 위원**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해봉 위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11월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보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든지 이런 것이 판단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같이하고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된 다음에 분명히 추진되어야 될 과제인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금년도 핵 불능화 정도—이렇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체제로 간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 선언에 북한 핵 폐기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된 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 정상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봉 위원** 비핵화에 있는데 비핵화가 아직 까지도 약속만 있을 뿐이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보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이미 하고 북·미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남북이 과연 이 역사적 책임, 역사적 과제를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감당해 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봉 위원** 바로 미국 부시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정전협정 당사국 중에서 미국은 우리의 분명한 우방입니다. 우방인데,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핵 폐기 이후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그것이 미국 부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누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자 또는 4자에, 종전선언에 관련된 그런 협의를 하면서 미국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지난번 APEC 회의에서 있었던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과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런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협력을,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3자라면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고 4자라면 어느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남북이 당사자 국가로서 이 문제

를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관련국들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봉 위원** 3자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해봉 위원** 왜 그러십니까? 남북 정상이 지금 합의를 해 놨는데, 3자 또는 4자 이런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것이 과제에 따라서 가령 그것이 종전선언일 경우와 평화체제를 논의할 경우, 여러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외교적으로 잘 좀 논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 제안도 사실 북측에서 제안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해봉 위원** 북측이 제안했든 어떻든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3자가 어느 나라이고 4자가 어느 나라라는 것을 일단은 북측에서 제의했다라도 북측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합의를 해야지 북측에서 어느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우리가 3자 또는 4자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봐도,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또 다른 분이 질의할 거예요.

통일부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평화선언은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평화선언 이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통일부 자료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분명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분명히 통일부 자료에서 이렇게, 세미나나 여러 통일부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경우에, 그럴 때 정부의 대응책이 뭐니까?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워크숍이라는 게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논의를 해 왔었고, 이번에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측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자꾸 이해만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북 정상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선언문 제2항에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남쪽의 국가보안법 또 북쪽의 노동당규약 이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로 인해서 남남 갈등이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당연히 앞으로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이번에 마침 국회대표도 참석을 해서 국회 간에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국회대표는, 지금 제일 큰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국회대표 간에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 관련해서 보면 노동당규약 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노동당규약이라는 것은 남한이 적화통일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노동당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그러나 국보법 개폐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거예요. 성격이 판이하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당규약 개정 정도는 그냥 적화통일하겠다 하는 선언만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이 노동당규약을 맞교환 형식으로 이렇게 개정해도 좋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드릴 말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법을 적시해서 논의하거나 토론하는 없습니다.

○**이해봉 위원** 없는데, 여기서 법적·제도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이것은 국가보안법하고 노동당규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리 가령 국가보안법만 덜렁 손질해 놓고, 새로운 법이든 안 그러면 폐지든 간에 덜렁 손질해 놓고 북한이 노동당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아무튼 정부가 국회와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해 가야 할 문제이지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봉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습시다마는, 시간도 벌써 지났고 또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위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밤 늦게 도착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정몽준 위원**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도라산역에 들어온 것이 아마 9시 조금 넘어서……

○**정몽준 위원** 서울시내 들어오신 것은 몇 시에 들어오셨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시내에 제가 한 11시 가까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러셨지요?

제가 어제 10시쯤에 시내를 지나가는데 광화문 근처에 경찰들이 줄을 죽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돌아오는 시간이 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내에 경찰 경비를 엄하게 해야 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제? 이번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무슨 시위가 있을 거라는 정보가 있다든지, 왜 그렇게 경비를 심하게 했나요, 어저께 밤 늦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몽준 위원** 시내에 혹시 경찰들이 죽 줄 서 있는 건 보셨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어저께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갔기 때문에 시내 상황

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정상회담 다녀오시느라고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국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 관계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아주 미래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또 이번에 회담하시는 중에 보도를 죽 보면서, 지난 7년간의 남북 관계 성과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성과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을 해 보면서 좀 착잡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에 개성공단에 갔을 때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남과 북이 함께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은 앞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을 쓰는 것이 결국 그렇게 썩 양측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정몽준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는, 우리 위원회 보고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개혁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개성공단을 더 많이 만든다, 이런 보고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는 사실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 회담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북한 관계의 어떤 특수성·이중성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재정 장관께서는 이러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중성을 갖다가 신중하게 살피면서 항상 정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7년간의 성과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무슨 현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역시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을 지금 한다는 것 또 무슨 미사일을 만들어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요.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에 상호 신뢰의 수준이 과연 제고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고된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정부는 지난 7년간의 성과다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 성과는 여러 면에서……

○정몽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관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한 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또 우선적인 과제는 교류와 협력의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또 평화 공존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평화 정착의 단계에서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정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랑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교류와 협력의 방법을 통해서 평화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을 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동의합니다.

○정몽준 위원 다 동의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정몽준 위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통일하자, 이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자유민주주의하에 통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몽준 위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을 장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통일을 하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하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떤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에 접근해 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 참여정부에서 이제까지 우선 평화 정착과 공동의 번영이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그 실천을 해 왔습니다.

○정몽준 위원 글썄, 저도 장관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우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통일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평화공존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입니다.

○정몽준 위원 우리 정부 부처 이름이 통일부지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지요.

○정몽준 위원 그렇지요,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제라는 표현은 우리 장관이 표현에 좀 부담을 느끼고 구현이라는 표현을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저는 그 자체가 무슨 그렇게 단어 하나로 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같은 뜻이지요. 체제로 하나 구현으로 하나 같은 뜻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을 하면 그것이 바로 평화공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바깥에서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남북한은 현재 이념과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교류와 협력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연적으로 과연 평화공존에 바로 직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는 이번에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처럼 그 생각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평화나 이런 것도 결국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완성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결국 누구나 평가하듯이 대단히 중요한……

○**정몽준 위원** 다시 얘기하겠어요.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이나 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지요.

○**정몽준 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이 문제의 뜻은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남북 간의 가령 기술과 자본 그리고 노동력의 협조로 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남북 간의 이해와 이런 것들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괜히 쓸데없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로 해서 오해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어요. 이 장관 말씀 알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이 장관께서 계시는 동안에 그랬든지 그 전에 그랬든지 개성공단 얘기가 나오면, 또 여당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도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성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정부 보고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자동적으로 평화공존으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은 좀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인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양측이 어떻든 굉장한 노력과 또……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7년이 아니고 또 길게 봐서 10년이라고 할 경우에도 지난 10년간의 남북 관계 운영 방식이 과연 궁극적으로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평화유지, 평화공존의 문제에 과연 도움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선뜻 그렇다 하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착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북한의……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못 합니다.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북한의 지도 책임자들이 과연 요전에 이 장관께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정몽준 위원** 이번에 왜 합의서에는 그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특별히 그것을 넣고 할 이유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몽준 위원** 장관께서 이번 회답에 가시기 전에 이 위원회에 오셔서 남북 관계에서는 역시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남북 간에는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는 안 그런데 장관이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칭취 불능)- 이번 회답에서도 그런 것이 언급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회답에서 물론 과거의 경우 7·4 공동성명이라든가 그런 기타의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됐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점진적으로 증진되어 나온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정몽준 위원** 장관께서는 말씀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장관하고 -(청취 불능)-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92년 남북기본합의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발표한 글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평화체제 논의 같은 것을 우리 남북한 간에 주도적으로 한다, 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주도적으로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다 좋은 말씀인데 주도적으로 하려면 어려운 일을 갖다가 우리 남북이 정말 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6자회담에서 한다 이런 것은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정몽준 위원**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정몽준 위원** “지금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있는 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소련의 책임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핵무기를 줄여야 되는데 핵무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청취 불능)- 해 놓고 나서 실제로 중요한 회담을 소위 나토 같은 국제기구에서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지금 6자회담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화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핵 폐기의 과정을,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자회담의 틀에서 남북이 어떻게 이 일을 잘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합의야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몽준 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위원장 김원웅** 정몽준 위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몽준 위원** 지금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6자회담의 -(청취 불능)- 굉장히 오래되었고 남북 사이에서 6자회담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 -(청취 불능)- 우리가 거기에 최소한도 맥락이 연결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여간에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항상 고려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우리 남북한 간에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문제가 노출될 대로 노출되고 또 모순된 기대, 모순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문제를 하나씩 쌓아 나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부는 이제까지 모순을 해결하고 아무튼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모순을 축적하기 위해서 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정몽준 위원** 이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다시 얘기하면 정부가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발표했어.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해 이 장관께서는 좀 늦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10분이 가까워 오면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고 꼭 추가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입니다.

2007년도 남북 정상 선언은 남북경협과 또 평화정책이라는 그런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 관계 발전을 크게 진전시킨 성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에 이어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평화번영정책의 중요

한 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번의 남북 정상 선언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991년에 합의하고 92년에 발효시킨 남북 기본합의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에 조약 형식의 신사협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선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 한반도 평화정책의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합의를 해 놓고도 사문화된 측면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공동선언문에서도 남과 북이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한다든지 또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든지 또 개성-신의주 간의 철도, 그다음에 개성-평양 간의 고속도로 공동 이용의 개보수 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국비의 소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선언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적시한 향후 추진계획에 나타난 바대로 남북관계 발전법 21조에 의거해서 합의서 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이번 선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제처에 일단 심사를 돌리고 있고요, 법제처 심사 결정에 따라서 이번 이 선언이 정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또는 입법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대로 할 것이고요, 현재 유관 부처와 협의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좀 밟으셔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면 이 비준을 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중요한 사항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이 선언에는 구체적인 액수나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경제공동위원회나 혹은 총리급 회담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정리가 될 때 다시 만들어진 합의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선언이 과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3자 간 또는 4자 간 협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P통신 보도에 보면 평화협정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한국전에 개입했던 미국과 중국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한국은 1953년에 체결한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3자일 경우에는 한국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우려하는 보도가 외신에 있었는데 당사국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6자회담 틀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간 협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3자 간 협정의 경우에도 그간에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3자 협정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94년 12월 군정위에서의 중국군 대표 철수를 통해서 사실상의 관할권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3자일 경우에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비핵화, 냉전체제 해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향후 동북아의 평화·안보 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중국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4자 협정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각 나라의 입장을 보면 미국도 남·북·미 3국을 언급한 적이 있고, 또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포럼 참가국으로 중국의 참여를 인정해서 4개국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의 경우는 자기네들의 군정 위 중국군 대표 철수가 자발적인 소환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 법적 권리 유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개국을 당사자로 주장하고 있고 3자 협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저는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를 3자 또는 4자로 규정하지 말고 오히려 4자로 해서 확실하게 남·북·미국·중국이 같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나, 3자 또는 4자로 규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한반도의 종전이라든가 평화체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당사자 국가라고 하는 양측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국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자 또는 4자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의제에 따라서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일정한 정도의 판단의 유연성을 줬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어떤 경우든 남북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양 정상 간의 이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이고, 이를 위한 역사적 책임을 남북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3자 또는 4자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입장이 갈등을 빚는 경우에 또 남쪽이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강조점이고, 다만 중국의 역할도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자로 가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보다 바람직하고 안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느 누구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입장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 공감대 위에 평화 정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합의문에서 가장 강조점은 역시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자가 될지 4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委員 저는 이번 정상 간의 선언이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에 진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바랐던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좀 기여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못했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의지라든가 방도를 밝히는 구절이 여기 어디에도 한마디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보면, 단순히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언급뿐입니다. 그것이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아니고 북핵문제 해결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보고회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 지도자가 핵 폐기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언급을 했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 의지를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왜 공동합의문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왔습니다만, 과거와 다른 면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김계관 북측 6자회담 대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의 도중에 불러서(우리 대통령의 동의를 받으시고) 6자회담의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0월 3일 첫 회의입니다.

○金德龍 委員 아니, 북한 지도자가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했는데 김계관 씨의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공동선언문에 그게 왜 빠졌냐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래서 6자회담의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받은 결과로 양 정상은 6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북핵 폐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것을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金德龍 委員**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북핵문제 해결인데 이게 선언문에 이렇게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항 중에 보면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15 선언의 2항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도 재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재확인한 것이지요.

○**金德龍 委員**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6월 15일을 기념하려고 하는 겁니까? 혹시 햇볕정책을 영구 기념하겠다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북측에서는 실제 6·15 기념일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 남북 간에 6·15 행사를 공동으로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일부에서 6·15를 기념하는 기념일을 정하자는 운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좋습니다.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장관님 아시다시피 북측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공동사실을 통해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집권 저지하겠다고 늘 해 왔는데 이것도 분명히, 대선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요구를 명시적으로 이번에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를 명시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대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쌍방 간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이 문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장관은 앞으로 북측이 한나라당 집권 저지한다든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金德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보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법률적 정비가 뜻하는 것, 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헌법도 손대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법률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金德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그동안에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국정원 철폐,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논의는 없었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런데 구체적 논의 없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합의문에 실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통일 지향적인……

○**金德龍 委員** 북측이 하자고 하니깐 그냥 쓰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통일 지향적인 목적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

○**金德龍 委員** 아니,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제도적 장치, 법률적 정비…… 이것 뭐가 논의돼야 이런 것을 쓰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공동선언문에 쓴단 말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앞으로 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고요, 여러 계층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德龍 委員** 좋습니다.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이라는 게 그동안 북한이 늘 주장했던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것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고요.

○**金德龍 委員** 좋습니다.

NLL 문제인데요,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그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결과적으로 NLL이 무실화 내지는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성급한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은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남과 북 양자만의 합의로 NLL에 대한 지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역시 관련국들과의 협의는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그리고 이 NLL에 관한 문제는 영토에 준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국민적 합의 없이 11월 국방부장관과 저쪽 인민무력부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도 당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느 공식 문서에서도 NLL을 영토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써 놓은 데는 없습니다.

○**金德龍 委員** 영토에 준하는 문제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NLL을 우리의 안보를 지켜 나가고 우리들의 어떤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왔고 지켜 왔던 것이죠. 영토라는 개념으로 어디고 돼 있는 것은 저는 발견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토 개념이나’ 이랬을 때 제가 ‘안보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金德龍 委員** 잠깐, 저는 영토 개념이나 그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하고 인민무력부장 둘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남과 북만의 합의로 지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 당시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논의하면서 당시의 정치권에서 남북 간에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金德龍 委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전선언,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주체가 되자고 그랬는데 아무리 북측이 제안했지만 이 주체가 셋인지 넷인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논리로 이렇게…… 무슨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주체의 문제를 왜 선언문에 구체화하지 않고 생략한 이유가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의 남북이 어떻게 역사적 책무를 다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논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될 때 그때 가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金德龍 委員** 중전 선언이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핵문제는 중전선언과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기보다도 오히려 전반적인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리고 북·미 관계, 동시에 동북아 평화라는 전반적인 점에서 아마 풀어 나가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알았습니다.

5항 6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협사업, 많은 비용이 들겠지요? 대충 계산은 해 봤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정부로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액수를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30조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달 방법도 물론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겠지요? 내년엔 남북경협자금이 지금 1조 3000억인가요? 그런데 9000억은 이미 결정돼서 4000억밖에 여유가 없는데 이 많은 경협사업이 이 4000억 예산가지고 불가능하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이것이 뭐 꼭 국가재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투자라든가 혹은 제3국의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金德龍 委員** 알았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또는 국제 차관도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

○**통일부장관 이재정** 오히려 정부로서는 이 사업을 만일 앞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민간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기금 투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책임의 일면으로 시행할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위원장 김원웅**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 정상을 향해서 제언을 한 중에 한 가지가 국내와 해외에 있는 냉전 수구세력 그리고 보수 네오콘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말씀을 대단히, 행보를 신중히 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일단 대단히 성공적으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아무튼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핵 폐기나 또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확실한 언급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상회담의 양 정상 간의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 불능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6자회담의 북핵 폐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북측의 입장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6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조하고 노력한다는 이 점이 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성 위원**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NLL 문제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변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또 통일부장관님의 답변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일체 거론조차 안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장

을 고수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김정일 위원장도?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번에 방북을 같이 수행했던 분들이 어제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그 정상회담장에 있었던 배석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방북했던 분들이 책임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후에 혼란이 올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엄밀한 내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 변영의 토대를 닦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다음 정부의 이행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앞서 말씀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 내용들을, 이것이 뭐 1, 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것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속에 첨부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넣는다는 것이지요.

○**최성 위원** 예,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또 다음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다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께서 오늘 남북합의서에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 법제처나 관련 부처의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의 기본합의서 때와 다른 점은 작년 6월에 이미 법이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나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체결·비준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무슨 권 부총리가 국가재정 부담 없이도 경험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보고요.

어떻든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있고 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진행이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현재 유력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 재정적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번 국회에서 이 남북합의서에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이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예견하거나 혹은 유추를 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추진이 되다가 차기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떤 정부와 어떤 대통령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있다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중단할 경우 남북 관계나 국제적인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너무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직 어떤 방법으로 자금 운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는지, 예를 들면 해주에 특별공업지구를 만들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는지 아무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령 재정투자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성 위원 장관님, 그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에 불과하면 모르는데 장관님께서 직접 관장하신 것처럼 10개 항의 모든 내용이 민간 차원의 비용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 국민적 부담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햇볕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정책과 남북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하여튼 저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무리 없이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오늘 보고 중에서 장관님께서 북측이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했는데 굳이 3자를 추가시킨 북측의 의도나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여러 학자들의 논의 과정 속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하나의 제의 한 바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꼭 3자가 누구고 4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뭐 다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만, 문서상으로 이것을 밝히지 않고 넣어놓은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최성 위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보고 내용은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남측이 노력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보고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대화 가운데 있었던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 내 양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이 회의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성 위원 저는 이번 남북합의서를 보면서 또 최근 6자회담의 진전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수시 만남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다시 재현될 수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성 위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졌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가능성에 대한 것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성 위원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납치 문제 및 북·일 관계 정상화 관련하여 후쿠다 총리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특사까지 파견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일 관계 정상화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북·일 관계는 역시 일본 정부가 새로 구성이 되고 거기서 역시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이 있는 다음에야 아마

어떤 점이든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과정 또 회담 합의 과정에서 일각의 언론 보도는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의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통일부장관님이나 통일부 역할이 왜소화됐다는 이런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 주무 책임자로서 통일부장관께서는 남북합의서에 또 남북 관계 진전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간의 교섭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는 것도 저는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도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번 남북합의서가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달리 실제로 상당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고 또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된 상황에 있어서 정부는 어떻게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인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제가 잠깐 장관님께 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결돼서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면, 조금 전에 최성 위원께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장관님께서 “구체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례로 해주 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해주 개발의 규모 같은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발의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추정치나 예산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국회에 동의안이 회부됐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도, 여기에 무슨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여기서 그런 일을 한, 지금 개성공업단지의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

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고 개성-신의주 간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합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 안 됐다고 해서 국회 비준의 대상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법률 내용을 보게 되면 현저한 국민 부담이나 현저한 예산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현저한 부담이 어느 정도의 것이 되는지 그 판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성공단 문제도 민간인이 진출한다고 하지만 SOC는 국가 부담으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철도 건설이라든지 또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하여튼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계속 뒤로 빼면서 이걸 안 할 것 같은 그런, 안 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하면 해야지 왜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아니, 안 하는 이유 같은 것을 자꾸 대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 委員 장관 어제 수고하셨는데 장밋빛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TV 토론회 나간 적 있습니까, 어디 방송사에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제가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성욱 교수가 이번 정상회담의 평점을 매기면서 B와 C 사이의 평점을 매겼는데 장관이 좀 불만스럽다 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기대는 A+를 기대했는데 너무 야박하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드

렸습니다.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구면요.

저는 오늘 평점을 그보다 더 못한 C- 정도 주고 싶은데 너무 섭섭하지 않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이구, 위원님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매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容甲 委員**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한마디로 제가 보면 북한은 싫은 것은 다 거절하면서 실속만 챙기고 반면에 우리 남한은 선언적 립서비스만 받고 퍼 주기만 약속하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언문 8개 항 중에 북한에 유리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중의 선언문 1항은 북한이 정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약방 감초처럼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가 담겨져 있는 6·15 선언을 앞으로 지켜 주게 되었고, 2항에서 내정 불간섭과 법률적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가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항에는 서해 공동어로 평화수역 설치 방안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들어 준 것으로 사실상 NLL이 무력화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항에서는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선언문에는 6자회담이라든가 9·19 공동선언,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하는 원론적인 선언적인 그런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흡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3자 4자 정상들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도 북한 측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로 5항의 경제협력 합의가 직간접적으로 계산해도 지금 30조 원 내지 50조 원, 어느 신문에는 6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문학적인 퍼 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퍼 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판단하는 것으로서도 아직 규모도 결정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한 가지 제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한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독일이 서독과 동독 간의 통일을 할 때 통일 이후에 15년간 매년 100조를 지원했습니다.

○**金容甲 委員** 가만있어요. 내가 그것 질의 안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남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물러섰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참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통령이 끈질기게 이걸 설득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과 절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金容甲 委員** 얼마나 설득했느냐 이거지요, 진지하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진지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金容甲 委員** 얼마나, 시간이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을 양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金容甲 委員**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통일부장관 이재정** 회의 내용을,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容甲 委員**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까, 설득하는데? 아니, 그래야 국민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어느 정도 한지도 모르겠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이미 양측의 장관급 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돼 왔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甲 委員** 여기서는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임기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선언으로서 마무리 짓고 후속 추진 문제는 다음 정권이 해야 옹습니다. 총리 회담도 그렇고 국방부장관 문제도……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노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좀 순치되어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소위 김정일 북한 억압체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인권을 침해당하고 고통받고 굶주리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문 중에 가는 곳마다 대통령으로서 참 낮 뜨거운 그런 언행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인민’ ‘인민’…… 인민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민주주의 전당” “인민이 위대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행복해진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개혁·개방을 싫어한다, 이제는 그 소리 해서는 안 되겠다, 마치 북한의 전도사처럼……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제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개혁·개방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개혁·개방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金容甲 委員** 이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 물론 그쪽에 가서 그쪽을 위무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개혁·개방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최고의 목표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 나가자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이는 적절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방북을 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위에 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우리 노 대통령이 서로 대적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이것 의견 모양이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보면 3류 국가의 원수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장관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북측에서는 사실상 우리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에 대해서 상당한 존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와 봉황기까지 달고 평양 시가지

를 수 있었었고요.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으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런 면도’가 아니라 그런 면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간의 발전에……

○**金容甲 委員** 있으면서, 저기 말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간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金容甲 委員** 회답 중에 대통령께 말이지요, ‘대통령이 이런 것도 결정 못 하느냐’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뭐 파격적이라고 하지만 좀 심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최고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회답을 하기 전에 수해 문제가 이야기되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 중에, “수해가 잘 복구돼서 정리되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는 중에 적어도, 수해를 도왔던 여러 나라 지도자한테는 김정일 위원장이 고맙다는 인사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왔으면 ‘이번 수해에 남한에서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런 소리는 당연히 했어야 옳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김정일 위원장이……

○**金容甲 委員**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냐 하면 다른 나라는 100만 불 정도 도와줬는데도 고맙다고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2210억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적인 감사의 뜻을 첫날 공식적인 모임인 만수대의사당에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모임에서 김영남 위원장이 아주 정중하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金容甲 委員**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 이야기를 왜 못 들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장관님, 이번 대통령 수행하고 정상회담하고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

요가 없습니다. 3일 내내, 이전 2000년하고는 달리 전 언론이 생중계로 낱낱이 숨결까지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아마 또 언론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해 낼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앞으로 남은 총리회담 또 국방장관급 회담, 각종 회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것을 수행해 나가나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 회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라고, 특별수행원에 각 정당에 초청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사실 조금……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의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당히 좀 추상적이어서 미흡한데요, 앞서 한나라당의 어느 위원님께서 “한나라당이 안 갔는데 어떻게 국회가 대표성을 갖고 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한나라당이 왜 안 갔지요? 한나라당 말고 또 안간 정당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가 공식적으로 각 정당에 대표 한 사람씩을 파송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한나라당……

○**임종석 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다 갔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것은 정당을 떠난 민족적 문제로 보고 모두가 가서 조금 더 화해·협력의 길을 넓혀보기 위해서 참여한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전달해 온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임종석 위원** 아무 이유도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고만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꾸 흠집내고 시비를 걸 일이 아니라 과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민족 문제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면서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흠집 내는 본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국회 비준 문제인데 이것 비준받아야 합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검토해 보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11월 달에 1차 총리회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제가 합의문에 보니까 1차라고 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임종석 위원** 이것은 2차, 3차를 또 생각한, 염두에 둔 걸 텐데요, 그러면 11월 달에 서울에서 있을 1차 총리회담에서는 이 합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양 정상 간의 합의사항은 우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하는 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께서 하신 이야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면밀히 따질 때가 됐다. 비용이 몇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국회 동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퍼주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합의문 전체에 대해 비준을 받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 부분 부분 나누어서 비준동의를 받아야지 뭉뚱그려서 전부를 비준받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머뭇거림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한나라당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합의는 말입니다, 내용에 비용이 들어가는 많은 경험 부분들이 만약에 빠진다면 전체 합의가 무산되는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거지요. 결국 이번의 정상 간의 합의는 통째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일이고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담과 남북 간의 화해·협력, 경제 협력을 위한 미래 창조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국민들이 보는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국회가 판단하도록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91년의 합의서, 2000년 정상회담의 합의도 사실은 비준했어야 합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만든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회의 비준 절

차를 밟도록 우리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대통령과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런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위원**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국회의 비준을 위해서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과 함께 이번 선언을 집행해 나간다는 태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NLL 문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NLL(북방한계선)은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NLL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손해고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NLL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서해상에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하고 평화수역으로 결정하기로 한 이번의 합의는 매우 만족스러운 합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평화수역을 설정할 것이냐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기 전에도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이번 정부가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털어 내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위해서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조에서 11월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장관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평화협정 맺는 문제 말입니다. 평화체제를 맺는 문제가 9·19 공동성명에는 관련 당사국 간에 별도의 회담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임종석 위원** 이번 남북 간의 합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3자 또는 4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읽어 보면 “3자 또는 4자 정상은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3자는 아마도 북한 한국 미국일 겁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예상합니다.

○**임종석 위원** 4자는 남북한에 미국 중국을 포

함해서 4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임종석 위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휴전협정을 미국하고 맺은 것이기 때문에 평화협정도 북·미 간에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9·19 선언에서 관련 당사국 간 별도 회담이라고 진전을 시켰다가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3자 또는 4자로 함으로써 한국이 당연히 관련 당사자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갖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맺어나가는 주요 당사자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은 큰 진전이요.

제가 한 가지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3자를 아마 북한이 주장한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전문가들 분석대로 이해하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

○**임종석 위원** 북한이 말입니다, 이 평화체제 협정에 한국이 대상이 아니라든지 또는 미국이 대상이 아니라든지 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지금 3자의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맺자 이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 온 것은 보통 2+2, 남북 간에 맺고 미국과 중국에 보장하든지 또는 거기에 유엔까지 보장하자 이런 정도 안을 검토해 왔었는데 한국과 미국이 참여하면서 북한과 맺는 협정이라면 3자든 4자든 우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번 협정의 기본 정신은 남북이 당사자 국가로서 한반도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에 책임 있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그것이 저는 진전이라는 거고요. 남북이 당사자로서 책임 있게 평화협정을 맺어나가고 거기에 미국이 참여할 거냐, 미국 중국이 참여할 거냐 문제는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저는 터무니없는 흠집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

에서 “남북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자회담에서 핵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매우 원만하게 빠른 속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6자회담에 우리가 책임 있게 참여하고 있고, 이미 올해 안에 핵 불능화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제외가 사실상 합의가 돼 있고, 그동안 북한이 거부하던 우라늄 의심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의했고,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합의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것 말고 어떤 합의를 더 해 오라는 건지……

저는 아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흠집 내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번 합의가(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예, 권영세 위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부 이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소인가요,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한 1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직 정확한 판단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판단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왜냐하면 특히…… 아니, 개략적인 판단도 어려운 것이 가령 남포나 안변에 조선산업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는 해주의 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부터,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아직 유추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합의가 얼마든지 내용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축소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권영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될 수 있

고 또 좀 작게 쓴다면 적게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일단 실링이라도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조선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상당히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600억 불 정도의 수주를 받고 있고 이것을 지금 생산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은 조선산업 자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북쪽에 그런 생산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내야만 할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세 위원 필요성은 인정이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권영세 위원 우리 국내에서 예산을 쓸 때도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런 경우에 국가……

○권영세 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국내에서 예산을 쓸 때도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은 아닌데 결국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 혈세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상한이 될 것이라든 것은 개략적으로 계산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가서 합의를 하고 오신(통일부장관께서 하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합의를 하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지도 모르고 지금 추상적으로만 합의를 하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실행기구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고 아마 사업계획들, 이행계획들을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서 가지고 수고가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늦었지만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문제가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보다 더 잘될 수 있고 더 진전이 될 수 있고 거기서 합의되지 못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

아오셔 가지고 어저께 도라산역인가요?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 애초에 북핵문제는 남의 타작마당에서 할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들으셨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권영세 위원** 애초에 남의 타작마당에서 할 거지 여기서 지금 할 게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그 장소에 안 계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장소에는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들으셨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남의 타작마당에서 할 거고 이번에서는 빠질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권영세 위원** 말 그대로 남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자기 타작마당이 아니라 남의 타작마당에서 할 이슈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기본적으로 6자회담이 지금 원만하게 핵 폐기 과정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 합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남북이 6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 이에 대한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남북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의미에서 김계관 부상으로부터 직접 논의 경과도 저희가 듣고요, 북쪽 입장도……

○**권영세 위원** 자, 좋습니다. 김계관 씨는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송민순 장관을 안 데려갔지요? 그러면 천영우 본부장은 데리고 가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

○**권영세 위원** 거기도 안 데려가셨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외교부에서는 외교차관보가 참석했고요.

○**권영세 위원** 외교차관보 정도만 가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때는 이미 저쪽 6자회담에, 천영우 본부장은 북경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김계관을

그쪽에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내세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요, 회의 끝나고 오자마자 마침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불려서 얘기를 충분히 듣고 북측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든가 6자회담의 진행 내용을 그 자리에서 양 정상이 같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것이 결국 양 정상이 핵 폐기를 위한……

○**권영세 위원**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하나의 의지 표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하나의 증거이지요.

○**권영세 위원**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이 요구한 사안이라고 말하셨지요, 아까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원래 의제였었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도 요구를 하고요, 우리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북한이 요구한 건데 우리도 합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우리가 APEC 회담이라든가 부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관한 얘기들을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아니 원래 의제 합의를 할 때, 의제를 사전에 공개는 할 수 없었지만 의제 합의를 할 때 이 평화체제 문제가 의제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합의가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정상회담은 의제를 정해 놓고 의제 순서에 따라서 논의한 것이 아니고 양 정상이 필요한 의제들을 먼저 발표를 하고……

○**권영세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들고 나온 사안인데 우리도 들고 나오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권영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자 혹은 4자’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적어 놓았는데 아까 이게 이슈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슈별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다가 조금 아까 임중석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분명하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종전협정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돼 있습니까? 조금 아까 임중석 위원이 그런 얘기를……

○**통일부장관 이재정** 꼭 그렇게 질의하신 건 아니고……

○**권영세 위원** 아니요, 조금 아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린 거지요.

○**권영세 위원**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실 때 3자, 4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슈에서는 3자 하면 누구 누구 누구, 4자 하면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합의 하지도 않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요……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만 가지고 그냥 한 겁니까, 아니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합의가 돼 있는데 발표를 못 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자가 아니라 3자 혹은 4자이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국제사회와 협의를 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유보를 해 놓고 나가는 것이지 지금 어느 나라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영세 위원** 그러면 그 3자, 4자 중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그런 예상을……

○**권영세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러면 3자, 4자 이렇게 하실 때 최소한 남과 북은 분명히 당사자다 이런 부분은 왜 합의에 안 들어갔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남과 북이 그 3자, 4자 중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가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3자, 4자 중에 틀림없이 남과 북은 들어가는데 3자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둘 중의 하나만 들어오

는 거고 4자는 둘 다 들어오든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분명하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권영세 위원** 아니 조금 아까는 남과 북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분명하게 얘기 못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들어오느냐는 문제는……

○**권영세 위원** 아니 다른 나라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빠시고 3자, 4자에서 남과 북은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과 북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권영세 위원** 당사자로서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를 한 겁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당사자 중에서는 남과 북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슈별로?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아니 예상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예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앞으로 셋이나 넷이 누가 당사자가 돼야 될지를 지금 결정 안 한 상태에서 3자, 4자가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남북의 이번 합의 문서이지 다른 사람하고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남과 북이……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이……

○**권영세 위원** 남과 북이 중요한 주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권영세 위원** 글썽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최소한 그 3자, 4자 중에 당사자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

○**권영세 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앞으로 진전 상황을 좀 지켜보시지요.

○**권영세 위원** 그러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당사자로 분명히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사자로 분명히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합의는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합의된 대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남과 북은 무조건……

○**통일부장관 이재정** 합의된 대로 좀 읽어 주시고요,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합의된 데가 불명확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합의가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 같은데요, 최소한 우리 통일부장관님 말씀대로라면.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절대로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평화체제하고 북핵 문제를 비교할 때 둘 다 이게 다자협정…… 평화체제도 다자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북핵문제도 당연히 다자 문제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의 타작마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하고 있지만 이 평화체제 문제도 사실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장에서, 남의 타작마당에서 할 문제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뤘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면서, 남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타작마당이 있는데 또 타작마당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 타작마당에 우리가 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하는 것 아닙니다. 6자회담이 남이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영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북핵문제는 지금 다른 타작마당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평화체제 문제도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중에 북핵문제가 잘되면 평화체제도 논의하는 걸로 거기에 타작마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 돌아가서 북핵문제가 잘 돌아가니까 평화체제 문제도 그 타작마당에서 잘 돌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심도 있게, 또 그것도 3자, 4자 모호한 것을 합의해서 이 조항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공동선언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거기는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만드는 겁니다.

○**권영세 위원** 9·19 선언이나 2·13 합의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9·19 합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이번에 양 정상이나 나눈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한 합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이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 미국 대통령이나 여러 단계에서 이런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미 돼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국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논의에 대한 합의였기 때문이에요……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장관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답변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이 문구대로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문구대로라면 ‘수시로’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례화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것은 말은 수시로라고 작성을 하되 사실상은 정례화하자 이런 내용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례화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뜻이 있는 것이고요, 수시로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로라고 하는 것은 정례화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아까 해석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통일부 자료 보면 사실상

정례화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장영달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주가가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대문시장이 전에보다 좀 더 북적거렸다, 그러한 뉴스를 보면 좋은 경사는 경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큰일을 그래도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도 이번에 평양을 다녀오시면서 참여정부하에서 김대중 정부 2000년 방북을 연결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다, 이번 2007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가 적어도 다시는 깨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이번에 바로 평화를 확정 짓는 하나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번에 군사분계선을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걸어서 넘었는데 김구 선생이 1948년 그때 넘고 지금 60년 만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참 역사가 더디기도 하다 그런 느낌도 받아요.

서해안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도 설치하고 평화수역도 설치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국방부장관 회담, 국무총리 회담 이런 회담 등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특히 서해안에서 군사충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남북 해군들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해군들이 전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해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고 평화수역이 설치되면 서해바다에서 다시는 군사적 충돌 없이 남북의 어선들이 평화적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서해 문제에 대해서

개별 항목 항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든가 어떻게 계획하느냐보다는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은 아마 수산회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정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이번 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거나 남북공동어로수역…… 사실 남북공동어로수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 5년 전에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서해안의 수시 충돌 이런 것들을 보면서 NLL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같은 면적의 바다면적을 잡아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으로 하면 이러한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제안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된 것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남북이 이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서 남북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아무래도 지금 북쪽의 어선들은 남쪽 어선들에 비해서 성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남쪽 배는 북쪽에 가서 고기 다 잡아오고 북쪽 배는 남쪽에 와서 고기 제대로 다 못 잡아오면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데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좀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장영달 위원** NLL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NLL은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에서 평화적으로 활동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NLL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서 정부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늘 석간을 보면 한나라당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지금까지 되어 있었는데 강경 대응해야 되겠다,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가 있어요. 그 핵심 내용들을 보면 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10조 원가량을 또 퍼 준다면, 이러한 보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건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남쪽이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북쪽 자원이라거나 북쪽의 토지라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남쪽 조선업의 이익을 확대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퍼주기라고 했을 때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전혀 오히려……

○**장영달 위원** 그런 것들을 퍼주기라고 공격을 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사업의 관계자도 이번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계획입니다. 북측에도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경제이익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 총수들과 기업가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가서 북한의 투자환경들을 탐색하고 또 앞으로 기업들이 북쪽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점쳐 보는 기회가 되었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조선소를 건설해서 북쪽에다가도 남쪽에 포화 상태가 된 조선 시설을 해 보겠다 이러한 것들도 그러한 기업가들이나 또 조선 전문가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합의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번의 합의 내용들 중에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경제적인 투자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번에는 선제투자과 같은 형식이고요, 하나의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가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우리로서는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북한 주민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 자리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필요하면 지원하고 그래서 북한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쪽으로 휩쓸려 와서,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도 휩쓸려 오는 것보다는 현지 자기 고향에서 생활하면서 먹고살으로써 남북이 공히 안정을 유지하면서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저희가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한 것은 어떻게 쌍방 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하는 원칙 아래 논의를 해 왔습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것도 사실은 북쪽 주민들로부터 우리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가 있지만 또 북쪽 사람들도 이러한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아주 적은 월급이지만 그 이익을 구해서 자기 자리에서 안정을 찾고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장영달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2월 달 국회 본회의장 당 대표연설에서 남북정치인 교류라거나 남북 국회회담이라거나 국회 교류 이러한 것들을 통일부에서 좀 많이 주선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기억합니다.

○**장영달 위원**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 것 보면 통일부장관께서 정부 간의 정상회담 이런 것은 열심히 주선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제의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별로 많이 주선해 주신 것 같지를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섬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 의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간담회지만 국회 간의 간담회를 만수대 의사당에서 함으로 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모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국회회담의 모양으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장영달 위원** 한나라당에서도 큰 테두리하에서 마음속으로는 반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야 간의 남북 정치인 교류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추진하는 데 큰 지원이 되고 추동력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남북 간의 국회 교류라거나 정치인들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뒷받침

을 받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통일부장관께서는 국회 교류라거나 정치인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선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치권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번 정상회담에 성과를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입니다.

장관께서 북한에 몇 박 갔다 오시더니 사실 조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회의에 보니까. 오전 중 답변하고 오후 시간 가면서 답변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구체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답변하신 것은 정확하게 지금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법제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것의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위원의 질의까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임종석 위원이 얘기를 할 때에는 이미 제출하는 데에는 전제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셨고, 두 번째 3자 4자 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헛갈려요. 아까는 3자 4자 회담이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의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다가 또 임종석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한국과 북한은 분명히 들어가고 다만 거기에 3자일 경우에 중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미국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자일 경우에는 미·중국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다가 권영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그것도 또 헛갈렸어요. 한국과 북한이 반드시 들어간다

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지, 제출하신다면 언제쯤 그것을 하실 것인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만약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임종석 위원 말마따나 사문화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애써서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국회의 마지막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시고 이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자꾸 말씀이 무슨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한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법에 의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에게 현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른다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리에 닿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 자료집에 보면,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준비기획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장관님 소관부처에서 나온 것이지요. 틀림없는 자료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고흥길 위원** 여기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아직 실태조사를 더 해야 정확한 비용이 추산되겠지만 개성-평산 간 철도 개보수 비용은 최대 2900억 원,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의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할 경우에는 4400억 원, 이것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 SOC 건설 사업입니다.

북한 지역의 SOC 건설 사업에 민자를 들인다든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SOC 사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고속도로를 놓아 가지고 통행료를 받는다거나 관리를 몇 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수익성을 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민자유치를 SOC 사업에 투자합니까?

그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데 2900억 4천몇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현저한 국민 부담이라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가, 결국 이번 합의서를 통해서 국가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액수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연구하면서 이런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이 액수가 결정되게 되면 이거야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고 물론 비준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번 이 문서, 선언문에 대한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다르냐? 그것은 다르지 않고요, 임종석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느냐, 저도 그 예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이지 제가 확정적으로 어느 나라가 3자고 어느 나라가 4자다라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거지요.

○고흥길 위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강조하시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아까 장관 답변에서는 양자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3자일 경우에 중국이 들어가고 4자일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이것이 더군다나 AP통신이 보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국민적 관심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든가 애매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켜서는 곤란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양국 정상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 유감스럽게도 이 합의문에 보면 ‘북한 핵’이라는 세 자, ‘핵’ 소리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애매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6자회담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합의문 자체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문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없이 경험이라든가 우리 민족끼리 한다는 얘기만 수사적으로 자꾸 나와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6자회담에 대해서 왜 명백하게 얘기를 안 했느냐’, 또 한 가지는 핵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김계관 부상이 와서 설명을 했다 배석시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계관이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말을 위한 답변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때 말씀에 남북자 문제라든가 또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확인하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사실상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 정상께서 맺은 선언은 양 정상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내용들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북핵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왜 없느냐 그것은 양 정상 간의 의지로 표현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김계관 부상을 불러다가 보고를 들었다

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의 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이번에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제 판단으로는 이 이상 더 정확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양 정상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명백한 의지의 표명이고 합의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고흥길 위원** 북한의 인권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그것은 대통령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다 아시고 있는 일이지만 사실상 국군포로 문제와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물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합의문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합의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런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권 문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갈 문제이지 인권 문제 어느 사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흥길 위원** 국군포로나 남북자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사실입니다.

○**고흥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이화영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준비하고 무사히 잘 치르고 특히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것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우리 측의 요청과 요구 사항이 북측에 대폭 수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간다든지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다든지 또 일련의 북측에서의 환영행사 이

런 문제들을 보았을 때 우리 측의 요구사항들을 북측이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장관께 제가 하나 인상이 차원에서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북측의 최승철 부부장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준비팀들이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소장그룹들 아닙니까? 분류하자면 노장그룹, 소장그룹 하면 비교적 소장그룹들이 대부분 준비를 했는데 이 소장그룹들의 대남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태도에서의 변화 같은 기초를 좀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상회담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요청 사항이라든지 의제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북측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의 힘의 구조 이런 것들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의 흐름의 변화 같은 것이 좀 감지된 것이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화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북측의 소장그룹들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확대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의 예를 들면서 벽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개성공단의 예 같은 경우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개방의 전형이고 상당히 잘 된 남북 협력의 사례로 보는데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측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설비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남측 기업들이 와서 노동력만 값싼 임금만 취하고 북측에 기술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전해 주지 않는 잘못된 경제 협력의 모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개념 논쟁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역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자체를 하나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해도 북측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국은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단으로서의 경제적인 목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개혁·개방이라는 말로 자칫 오해가 일어나면 그것이 적절치가 않다는 판단 아래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이화영 위원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또 퍼 주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지원체제와 협력체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이 합의의 전제는 당연히 비핵화가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같이 북한이 전략물자 반출 금지 국가이기도 하고 또 테러 지원 국가인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해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는 전략물자 같은 것들을 하나도 북한에 반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협정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 하는 차원에서 첫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퍼 주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한강하구의 모래 채취사업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북측 모래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북측 모래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가지고 개성과 평양의 고속도로 보수작업을 지원한다 이런 상호주의적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유무상통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북쪽에서 취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북쪽이 도와주고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10조 원이 든다라고, 현대경제연구소인가 어디에서 단순하게 예산한 것을 가지고 10조 원이 든다고 국민을 왜곡하고 선전하는 행위는 정말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략적인 어거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컨대 이 문제가 우리가 어디에 조선평구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포구를 만드는 주변에 도로를 만들고 SOC 만드는 것은 우리 기업 잘 되기 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북에 퍼 주시다, 북에 10조 원 퍼 주시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결국 우리가 북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북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활성화, 우리 경제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동시에 북의 경제성장의 하나의 토대를 만든다, 이런 쌍방향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모든 사업계획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퍼 주거나 다른 말로 절대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화영 위원 그리고 평화가 갖는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비용을 따지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겠어요.

대통령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남북 간에 긴장 관계를 완화해서 평화가 있었을 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산출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 중에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3자 정상회담, 4자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는데 하나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측은 종전선언 당사자로서 남북을 기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종전선언 당사자로 남북이 있고, 북에선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중국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까? 장관께서 이해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하나의 당사자국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인데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물론 대개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전략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3자건 4자건 기본은 남북이다, 이거 아닙니까? 2자는 남북이 들어간다고 이거죠. 이것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이 중심이 돼서 이 문

제를 논의해 나가고 각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명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북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3자회담일 때도 남·북·미, 4자회담일 때도 남·북·미·중이지 남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동적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이 문제는 구체화될 때 더 분명하게 아마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화영 위원** 장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앞으로 말씀 있을 때……

그다음에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시비를 거는데, 북측에서는 남북을 인정합니까, 남북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담에서 어땠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회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분명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화영 위원** 국군포로 문제를 얘기하면 전쟁 시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북쪽 포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면 전쟁 시기의 북측 포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측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의 하나가 만약에 자기들이 남쪽 사람을 납치했다면 남쪽 사람도 북쪽 사람 납치 안 했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쟁 시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논쟁한다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운 과제고요, 현재도 이 문제는 아직도 풀어……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엄청난 역사적 성과를 낸 이 선언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내용에서 자꾸 이런 몇 가지 부분적인 것과 단편적인 것을 갖고 트집을 걸고 그것이 전체인 양 호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일부 보수 언론과 정당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차원에서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 과거에 그런 아픈 일이 우리 쪽에서도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공식적이고 당당

하게 얘기를 해 줘 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문제는 남북 간에 양쪽이 다 상처가 있는 문제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흡사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것처럼 자꾸 인상 지어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리 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만, 이것을 북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설득해 내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군포로 남북자 문제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을 풀어 가는 것이 지금 남북한의 화해·협력 시기에 올바른 방식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것은 국민 앞에 텔레비전 토론을 한번 개최하든가 해서라도 정부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야지 자꾸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을 후퇴할 수가 없어서 자꾸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쪼쪼매는 양상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고요, 현재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각급 회담에서도 논의를 해 왔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위

원입니다.

7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것을 평가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이재정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2007년 정상회담은 남북 경협 또 사회문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합의한 것도, 물론 구속력은 없고 상호 교환 방문 형식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 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또 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 또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한 것 역시 나름대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했던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진전이 없었다는 점, 대단히 아쉽습니다.

또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북한의 핵 폐기 문제, 또 분단 고통의 해소 문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 핵심적인 사항은 추상적인,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NLL 무력화의 가능성, 또 북측의 대남 전술의 일환인 우리 민족끼리의 정상 선언문에 포함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합의문이 아닌 회담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향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정상회담 그 자체에 들떠서 후속대책 수립에 미흡하거나 이를 대선 국면에서 평화 대 반평화, 또는 통일 대 반통일 이런 이분법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만남의 의미는 오히려 퇴색하고 말 것입니

다.

국회에서는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또 문제점과 후속대책에 대해서 냉철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통한 북핵 폐기 또 북한의 개혁·개방을 담보할 수 있는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장관께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A+로 생각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박진 위원** 성과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보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A+라는 것은 좀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렇게 받고 싶다는 의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번에 분단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진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B° 정도, 또 조금 잘 주면 B+ 정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섭섭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웃음).

○**박진 위원** (웃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첫날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잠이 오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됐는데 북한이 그렇게 군기를 잡았습니까?

우리 이재정 장관님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게 의미의 표현입니다만 대체로 처음 회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의 역사들을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처음 그것을 직접 듣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박진 위원**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선군정치에 군기 잡힌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회담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진 위원** 대통령께서 도라산에서 “묵직한 보따리를 가져온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묵직한 보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진 위원** 그런데 내년 2월에, 임기가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목직한 보따리를 풀어서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체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 대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하나의 토대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진 위원** 해야 할 일은 차기 정부에서 또 풀어 나가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우선 서울 방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본인이 답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주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 이유를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그 여건이 언제 성숙한다고 보세요, 장관님?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할 차례인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는데 언제 여건이 성숙한다고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이 문제를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측 판단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진 위원** 혹시 이것이 남쪽에서 급진적인 친북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거나 아니면 혁명적 역량이 성숙해야만 내가 가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진 위원** 만약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

○**박진 위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4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의문에 보면 4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자 또는 4자들이 만나서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4조가 가장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체제가 달성이 되는 것이지만 평화체제가 있어야 비핵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서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꼭 논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넣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진 위원**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2개를 섞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생각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두 번째 항에 있는 것은 6자회담 속에서 순조롭게 이행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2·13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이 어떻게 공동으로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위의 점은 좀 더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순서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진 위원** 저는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의 입장보다는. 왜냐하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우선적이고 또 그렇게 비핵화가 되어야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핵문제에 관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가장 아쉽고 이번 합의에 A를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를 위해서 북한의 연내 불능화 약속과 함께 핵 폐기를 이행한다 하는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이번 합의문이 나름대로 알맹이 있는 합의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도 빈약하고 순서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 지금 그것은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 위원**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사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건데요, 저는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진 위원** 저랑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3자, 4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써서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국제공조에 차질을 발생시켰는지 저는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계속 장관께서 직접 관련된 3자가 누구인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3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못 한다면 왜 이 안에 집어넣었으며, 합의문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 하는 정부가 과연 이번 협상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대단히 심각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자가 소위 한반도에서 군사 대치의 당사자인 남·북·미인지 아니면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중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요 이미 회의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이미 하였고, 한미 정상 간에도 이런 논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전선언의 형식, 구체적인 내용 또는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이 논의되려면 관계국들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의 성격상 관련국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자가 누구고 4자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남북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고 노력해 나간다, 이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입니다.

○박진 위원 장관님, 만약에 중국이 빠졌다고 하면 국제법상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남한이 빠졌다고 하면 국익상 중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직접 관련된 3자'라는 표현을 넣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논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4자다, 남·북·미·중 4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우리 외교부하고는 다른 의견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서 자체를 정상 간에 합의된 문서의 내용에서 3자 또는 4자라는 탄력적 운영을 얘기한 것인지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어느어느 나라가 당사자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아직도 정리해야 할 여러 가지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합의문의 하나의 골자입니다.

○박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이 모여서 얘기했기 때문에 남북 당사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그것을 명백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진 위원 중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중국이 배제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박진 위원 다른 나라하고 공조가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제됐습니까? 그러면 남한이 배제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어느 나라도 배제한 일이 없습니다.

○박진 위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3자면 4자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배제되어야 3자가 되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3자 또는 4자'라는 탄력적인 표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서에 합의된 내용의 정신을 가급적 문서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진 위원 저는 이러한 합의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 간에 또 남북 당사자 간에 분명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암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3명이 모이거나 4

명이 모여서 한반도 종전문제를 선언하자,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혼선을 빚는 그러한 잘못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박진 위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외교부가 배제된 것도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 문제를 탄력적으로 다루어 나가고, 적어도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남북 간의 결의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전적으로 외교부가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박진 위원** 저는 통일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부가 한 게 아닙니다. 정상이 해 낸 일이지요.

○**박진 위원** 통일부가 실무 준비 부처 아닙니까?

통일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없는 겁니다.

왜? 남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쟁 당사자입니다. 절대로 빠져서 안 됩니다.

또 중국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치는 하고 있지 않지만 휴전협정의 당사자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여기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요. 역시 나라들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3자 또는 4자’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도 바로 박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리고 남북이 이것을 주변 국가들에게 설득을 해서 결국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적어도 역사적 책무를 담보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합의를 냈

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정부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 이것을 이끌어 내는 남북 협력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물론 그동안에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가지는 거부감과 불신감이 대단히 큰 것 같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가면 그런 말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퍼 주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북한이 아무 변화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고 남북 대립을 계속 연장시킨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이 과연 그것을 계속 지지하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개방이라는 말 때문에, 북한의 거부감 때문에 우리 정부가 위축이 되고 우리 대북정책의 원칙을 깨뜨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문제가 해결돼야 평화가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변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정확하게 A냐 B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개혁·개방이란 말로 설명을 해야 개혁·개방이 되는 것이고, 개혁·개방이라는 말로 설명 안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양측이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양측에서 통일을 향한 노력을 해 나가는 관점에서 적어도 상호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오히려 적절하게 사안별로 실천적으로 개혁하고 개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개혁·개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다면 정치적 이용밖에 되지 않겠지요. 이런 점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박진 위원 개혁·개방의 목적의식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말도 써서는 안 되고 그런 목적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목적은 숭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혁·개방이라는 걸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표현입니다.

○박진 위원 그러한 개혁·개방이라는 효과가 나와야만 우리 국민들에게 30조, 50조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무 효과나 북한의 변화가 없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 참여정부가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일방적인 지원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해 온 바가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을 두고 얘기한 것이고요, 다른 부분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꼭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활로를 뚫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 한미 FTA 끌고 가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열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고요, 이것의 결과로 오는 것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 오는 것이고 역시 북이 앞으로 서서히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오

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무리한 논리를 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해서 공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뭐 하러 개성에 만들겠습니까?

우리 이남에 만들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북한 안에 있는 개성이라는 지구에 공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것이 북한 내부의 경제가 나아지고 또 북한이 스스로 변하고 또 외부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러한 단초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수궁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북한 근로자를 어디로 여기로 들여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 문제는 저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평화고,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노력과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 위원 그 점 역시 저와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지금 박진 위원님도 아주 상당히 진지하게 치열하게 깊숙이 질의도 해 주셨고, 조금 전에도 권영세 위원님이나 고흥길 위원님, 이화영 위원님이 계속해서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3자 또는 4자' 이런 얘기의 대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실 장관님 입장에서 3국 또는 4국이 어느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외교적 민감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국가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종전협상의 참여 대상 국가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해석이 통일돼 있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남북한만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여기 합의문을 그대로 그냥 읽어 봐 주십시오.”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전문에 보면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직접 관련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만나는 것도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남과 북 그리고 그 외의 1개 또는 2개 국가의 정상인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이 합의문의 맥락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게 이번 성과를 확실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법상으로나 혹은 종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 성격, 형식,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없이 사전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결정해서 가자 이런 얘기는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드린 겁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나 또는 사안의 성격상으로나 문서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하러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내겠습니까?

이 문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남북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외교적으로 여러 관련국들과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이 3자가 될지 4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탄력적인 것으로 제안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

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그래도 혹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리 남쪽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 합의는 남북 정상인 한 합의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이재정 장관님 2박 3일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북한에서 카운터 파트로 같이 고생했던 분은, 거기는 국회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런 고생을 안 하리라고 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을 느끼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남북 정상 합의서는 중요한 문서예요. 우리가 남북문제 죽 할 때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그다음에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선언문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북문제를 계속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A+냐, B+냐, B-냐는 지금 매길 수가 없어요. 이 합의서는 추상적인 어떤 방향만 정한 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8년 북경올림픽 응원단은 열차를 타고 남북응원단이 같이 간다든지 지역까지 아주 특정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실천이 됐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보다는, 일반적인 합의는 지나도 그거야 다 존중됐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합의서는 정확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받을 수 있는 합의 내용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 A+니까 더 이상 따질 것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 봐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정 장관님께서 이거 다 관여한 것도 아니고 의제를 다 설정하는 데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러니까 이 전체를 따질 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다 평가할 수도 없고. 다만 그래도 통일부장관으로서 주무장관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한 가지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위원** 예.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선언문을 적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진영 위원** 참여는 하셨지만 경제부총리도 갔고 부총장님도 갔고, 다 주무 파트가 있었으니까 부분 협의로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고 협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 국회 동의 여부를 확실치 않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동의받아야 돼요. 법률에서도 받아야 되고 헌법 취지에서도 받아야 돼요. 이게 단지 무슨 신사협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격하시키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음 대통령도 지킬 수 있게 내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법적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다음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또 다음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건데. 신사협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키면 신사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취지로 이런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북이 반드시 지켜야지요. 서명을 했으니. 특히 정상이 7년 만에 만나서 서명을 했으니 지켜야지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받아야 돼요. 재정 부담이 따르건 입법사항이 따르건.

법률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입법사항도 들어가 있고 재정적 부담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중대하냐 아니냐, 지금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받아야 되고, 또 이 합의서가 워낙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에 의해서 개별 합의서가 또 체결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의선철도를 개보수한다든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를 개보수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합의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차관 형식으로 할지 무슨 교환 형식으로 할지 그냥 인도적 지원 형식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세부적 사항은 다시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협의사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국회 동의 받아야 돼요.

법을 보면 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고, 그 기본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합의서는 제21조 4항에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서명만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합의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합의서에 나온 중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보법을 개정해서 노동당 규약을 바꾸는 합의를 했다. 국회 동의 받아야지요. 안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받아야 될 합의서도 많고, 이 기본합의서도 반드시 받아야지 이게 정상간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합의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본다든지 망설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의 심의를 따라서 결정해서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영 위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이것은 통일부에서 판단하셔야죠. 이것을 꼭 법적으로만 따져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중대성에 비추어서 어느 계약보다 어느 합의서보다 중요한 계약 아닙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신사협정이니 21조에 해당이 안 되드니 이런 식으로 격하시켜 버리면, 뭐 하러 정상들이 언론이 다 주시하는 속에서 가 가지고 도장 찍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 ‘3자 간’에는 반드시 남북을 포함한 3자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3자에는 반드시 남북이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이 합의서 내용을 봐도 “남과 북은 이렇게 협력해 가기로 했다.” 그랬으면 3자에 반드시 남북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포함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이재정 장관께서 지금 반드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 부분 해석을 불분명히 하시면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 또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통일부장관이 될 분들은 처음에 이재정 장관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헛갈리게 돼 있어요.

이 합의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고요. 북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남북은 반드시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해 봐야지, 여기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문서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이거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다든지 어떻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위원**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남북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지금?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야말로, 아직도 종전 선언하는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할 바도 있고 이 점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는 참여국 혹은 관련국들의 상호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겁니다.

○**진영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필요하시다면……

○**진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남북이 포함됐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추후 문서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지금 여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면 차기 정권을 맡은 사람 또 다음에 통일부를 맡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그 협상에서는 비록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 됐더라도, 이 문맥을 보면 저는 됐다고

보는데, 안 됐더라도 여기서서는 확실히 됐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종결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되면 나중에 너무나 복잡하게 돼요. 당사자들이 다 바뀌는데, 대통령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나중에 문젯거리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문맥을 보면 분명해요. 남북은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을 빼고 북한하고 중국, 미국이 이 부분을 한반도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다 정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보충질의 있으면……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국회 동의 관련한 이 사안은 조금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보신다는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인터넷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님께서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물론 이 상임위 때문에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상임위가 열리는 중에 정례브리핑을 해서 2007년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발효절차를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장관님 입장처럼, 이번에 2007년 남북 정상 선언이 합의가 됐고, 또 그것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고 조만간 이걸 관련 부처 협의 속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떤든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게 지금의 법 현실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그렇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 말씀을 해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비준동의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최성 위원 오전 브리핑에서도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입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목이 그렇게 나와서,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아직 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민간투자가 얼마가 될 것인지, 정부의 부담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게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최성 위원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통일부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을 계속 변경하는 것처럼 되고 청와대 또 통일부, 기타,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마찬가지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북한이 요구한 3자 내지는 4자 정상회의 관련해서 “북한이 중국 참여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1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제 도착하신 직후에 방북했던 분들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NLL, 국가보안법, 이런 정상 간에 논의가 나온 내용은 상식적으로 그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한은 남북 정상과 배석한 분들만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상회담 수단으로 가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않으시면 남북 정상회담의 좋은 성과가 지난 아프간 경우처럼 아주 엉뚱한 형태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시기 전에 제안했던 하나의 내용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사석에서 유감 표시를 하거나 이런 발언은 있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

지 못했습니다.

○최성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예상보다는 강도가 상당히 낮으신데 이재정 우리 통일부장관님의 말씀과 또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고 말을 자주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한나라당 입장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는 찬성이고, 정상회담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인데 핵 폐기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다뤄지지 않아서 아쉽고, 이명박 후보는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한나라당 당에서는 삼가삼불(三可三不) 해서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북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특히나 저는 북한 핵문제의 경우는 너무도 당연히 6자회담 틀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너무 비중 있게 다루면 ‘왜 남북 정상회담 틀에서 6자회담이 다룰 의제를 다뤘느냐’고 아마 난리 법석을 부릴 겁니다.

이러한 계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국회 동의를 받든 또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속적인 판지 걸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

○최성 위원 갑갑하시지요? 그래서 장관님, 국회 동의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한나라당 몇 분 위원님들도 요구를 했고 강제집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는데 남북관계 발전법에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니까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이걸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회 통과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과반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 보나 또 다음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007년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이제까지 이 판단을 통일부장관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비준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등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그 이상의 어떤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 사업,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는 합의서대로 또 국회의 비준동의를 역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넘어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는지, 그리고 민간투자로서 하는 경우 어떻게 될는지, 이런 모든 분야가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만들어 온 합의서를 놓고 오늘 당장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더라는 법률적 판단을 앞으로 법제처가 논의를 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와 논의가 없이 발표한다는 것도 졸속의 발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답변을 유보해 드리는 것뿐이지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추가 발언 없으면 한두 가지만……

○위원장 김원웅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장관께서 회의 시작한 지가 3시간 반이 됐는데 그대로 앉아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NLL 문제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번 협상 내용으로 봐서 무슨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NLL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장관께서 파악하신 바는 어떻습니까? NLL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일편에서 시비를 하고 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NLL 문제를 가지고 이번 협상에 관해서 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어느 편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 후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이 안이 보다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서해안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대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면 NLL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평화 정착을 위한 하나의 특별한 계획이고 남북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저도 동감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실제로 이번 회담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양 정상 간에 NLL 문제를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렇지요? 제가 국방위원회를 오래 해 본 사람으로서 이번 회담과 NLL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NLL 문제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정부로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영토 조항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NLL 문제와 헌법 조항 문제, 이 문제 간에 어떻게 보면 모순돼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지배 선 아닙니까, NLL은?

그렇기 때문에 NLL을 가지고 시비하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총 들고 쳐들어가는 얘기가, 이런 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NLL을 가지고 시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둘째로 금강산은 지금 관광특구로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관광할 수 있는 특구도 하나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하다못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게 한다든지 이런 특구가 하나 설치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실무 협상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논의를 하고 또 수시로 만나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 논의를 하되, 그러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쪽에도 관광특구를 하나쯤은 설치하자라는 안을 통일부에서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김제 모악산 아래 가면 김일성 주석이 속한 전주 김씨 시조 묘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남원 광한루는 동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얘기할 만큼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울 수 있는 요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관광지로 제대로 개발을 못 해서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남한의 광한루, 김일성 주석의 조상의 묘지, 또 전주에 치명자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가톨릭 신도들이 몰려서 관광을 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리산의 실상사라고 하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천년이 넘는 사찰이 준비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전라북도 일대를 남측의 관광특구로 설정을 해서, 좀 수도권 가까운 데만 교류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부의 지방분권 또 지역을 끌고루 발전시킨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봤을 때, 또 여기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바다를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남측에 관광특구를 설정해서 북측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교류를 할 때 그냥 수도권, 또 북측도 그냥 수도권에 가까운 특정 지역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전체가 교류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최적지이고 거기에다가 북쪽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의 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개발하고 설정하는 데 대단히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이해로는 남쪽에 어떤 관광특구나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은 통일부의 권한이나 통일부의 추천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문화관광부나 또는 다른 부처가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북측의 그런 것을 위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영달 위원** 과제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진영 위원님!

○**진영 위원** 우리 이재정 장관님께서서는 통일, 남북문제를 총괄하시니까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왜 비핵화 문제를 중요하게 얘기하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실 때 그 순간에 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가실 때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를 살펴보려면 6자 회담을 보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6자회담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북핵 해결의 목적과 북한의 북·미 관계 정상화의 목적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6자회담의 중심축은 북한과 미국이고,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 정세의 축은 변화하는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하면 북한과 미국의 축이 적대 관계에서 1년 전부터 밀월 관계로 바뀌고 가고 있다고요. 이 밀월 관계가 진짜 밀월 관계로 가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4자들이 잘 몰라요.

6자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계속 힐 차관보 얘기 듣고 김계관 얘기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6자회담이 중요한 게 결정이 되고 이 둘은 또 따로 만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6자회담에서 4자 간 평화체제를 위한 안보포럼이 결정될 거고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 다자간 평화안보체제가 이어져 나간다고요. 이 축 이어져 나가는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밀월 관계로 들어가서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북한과 미국이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남북문제도 편하겠단,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첫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 김정일 위원장 표정을 보세요. 아, 남북문제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걸 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1년 전부터 변해 가는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찾을 것이냐? 우리가 역할을 안 찾고 6자회담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갈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동북아 정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면 분단이 고착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뜻과는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미묘한 시점에 우리 역할을 찾느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축을 형성한다든지 6자회담을 보다 더 급진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역할을 찾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묘하게 어렵게 돌아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열망이 국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물론 6자회담 틀에 있지만 6자회담 틀에 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거기에서만 논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만나서 다 협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도로 따로 만나서 그런 축을 형성하고 또 한미 동맹축도 형성하고 이래야 동북아 정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현재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그동안 남북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 왔고요, 바로 그런 점들을 이번 정상회담 속에서 재확인하고 역시 6자회담 틀에서 남북의 공조, 남북의 협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정말 북·미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또 6자의 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적어도 남북이 6자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책임 있게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핵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확인입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6자회담 내에서의 역

할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뭔가를 하시길 바랐던 거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의 틀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직접 개입을 해서 직접 어떤 역할을 해서 ‘아, 그러면 6자회담의 할 과제들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다만 6자회담에 참여하는 대표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번 회담 가운데 특별히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상황 점검을 양 정상이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진영 위원께서 걱정하신 그 분야가 결코 경시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 위원** 마지막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이 갖는 국제적 관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가장 권위 있고 책임 있게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합의문 맨 마지막에 보면 “남과 북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정례화에 합의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마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는지 “이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만큼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세요. “남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거든요. 그러면 다음 차기 정부의 정상이 되면, 남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거고요, 지금 이 문안은 현존하고 있는 남북의 정상들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맞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다음 번 4항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최성 위원**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너무 이것을 확대 해석하

시지 마시고요, 이거야말로 남북의 정상이 남북 관계 발전에 필요한 현안이 있다고 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합의 할 겁니다.

○최성 위원 확대 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남북의 정상이 남북 관계가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남북 정상도 그렇고 또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현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만을 논의한 게 아닌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입니다.

○최성 위원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앞에 생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의 연례화라는 기존의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의 과제가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노무현 정부가 하든 차기 정부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남북 정상은 수시로 남북 정상회담이든 4개국 정상회담이든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4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요.

○최성 위원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문장을 보시지요.

‘남과 북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남과 북이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를 한 것인데요……

○최성 위원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데요, 앞서서 이 4개국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리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상회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글썄, 그것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최성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자구적인 논란을 할 건 아

니고요.

어떻든 과거 일부 진영에서 지자제나 대선이나, 아니면 갖가지 요구조건을 걸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반대를 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차피 대선 2개월 남겨 놓고 정상회담을 한 마당에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만나서 실질적인 의미 있는 진전을 관련국이, 남북 정상과 4개국 정상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관련해 가지고 개혁·개방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설명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공단의 개혁·개방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하게 남쪽에서 개성공단이나 여러 가지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김정일 정권의 붕괴 전략의 일환으로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부담스러운 표현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도 아, 그 지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개혁과 개방을 안 쓰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 개혁과 개방이 북한 경제의 회생과 남북한 화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한다고 해야지 김정일 위원장의 한마디에 향후 개혁과 개방 논의를 표현하는 데 정부가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는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아무튼 오늘 상임위 과정에서 입증된 것이 그토록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던 한나라당 위원님들조차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자구적인 형태로 본다면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A 학점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 A 학점을 통일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함께 유지 관리가 돼 줘야 최종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외교·안보, 기타 참여정부의 국민적 평가들이 높아질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또 국민적인 실망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장관님께서 좀 책임 있게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현안보고와 관련 통일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 부터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관한 정부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고 홍 길	권 영 세	김 광 원	김 덕 룡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진 표	문 희 상
박 진	박 희 태	배 기 선	이 강 래
이 해 봉	이 화 영	임 종 석	장 영 달
정 몽 준	진 영	최 성	한 명 숙

○출장 위원(1인)

정 의 용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회 권
전 문 위 원	허 태 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장 관	이 재 정		
차 관	이 관 세		
혁신재정기획본부장	조 용 남		
정책홍보본부장	고 경 빈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 중 태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양 창 석		
남북회담본부장	윤 정 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홍 재 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07. 10. 1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석 의원 대표발의)

(2007. 9. 19 임종석·강기정·배기선·장영달·정의용·김원웅·이인영·김교홍·김근태·유인태·이광철·강창일·김부겸·최

성·노영민·이화영·유선호·김재운 의원 발의)

9월 20일 회부됨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7. 10. 1 정형근·심재철·안경률·김영숙·권영세·김형오·박계동·원희룡·신상진·김희정·안명옥·고경화·홍준표·안홍준·정진섭·엄호성·배일도·유기준·김정권 의원 발의)

10월 2일 회부됨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 김무성·강재섭·김기춘·박종근·허태열·이규택·이해봉·이경재·김성곤·신학용·유기준·이낙연·엄호성·이계안·우제항·서병수·서상기·신상진·황진하·원희룡·윤두환·김석준·김양수·권경석·정중복·김학송·남경필·문희·장복심·권영세·노현송·안명옥·김태환·김병호·유정복·고조홍·이혜훈·김정훈·곽성문·이인기·이재웅·정갑윤·최경환 의원 발의)

10월 4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9건 2007. 9. 28 정부 제출)

이상 9건 10월 1일 회부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

(2007. 9. 17 안명옥 · 이한구 · 김애실 · 배일도 · 유기준 · 박찬숙 · 이계경 · 문희 · 임인배 · 황우여 · 김석준 의원 발의)

9월 19일 회부됨